

# 산재보험 왜 이리나

## 요율 계속 인상, 기업만 무거운 짐

인쇄 및 관련산업의 2005년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율이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1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1000, 인쇄업 18/1000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000, 5/1000, 15/1000이었던 2004년도의 산재보험요율보다 15~20%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올해 전체 산업의 산재보험요율이 평균 9.5% 오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더구나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쇄업의 재해자수 및 재해율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요율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전체·인쇄 및 관련업 재해율 감소

산재보험요율 산정 기준이 되는 2004년 9월말 현재 산업 전체의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2003년의 6만9960명, 2154명에서 6만5086명, 2050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재해율과 사망만인율도 0.67%, 2.06/10000에서 0.61%, 1.91/10000로 각각 0.06%P, 0.15/10000P 낮아졌다. 또한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의 재해자수는 583명에서 514명으로,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의 재해자수는 184명에서 150명으로, 인쇄업의 재해자수는 362명에서 308명으로 2003년 동기 대비 각각 69명, 34명, 54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재해율은 1.35%

에서 1.11%로 0.24%P 감소했고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의 재해율은 0.22%에서 0.18%로 0.04%P 줄었으며 인쇄업의 재해율은 0.94%에서 0.77%로 0.17%P 하락했다. 다만 사망만인율이 2003년의 2.09/10000, 0.96/10000, 0.78/10000보다 각각 1.37/10000P, 0.13/10000P, 0.21/10000P가 늘어 3.46/10000, 1.09/10000, 0.99/100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만인율의 경우도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제외한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과 인쇄업은 전체 평균에 밀도는 수준이다.

### 재정악화가 보험요율 상향조정 원인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은 물론이고 산

# 산재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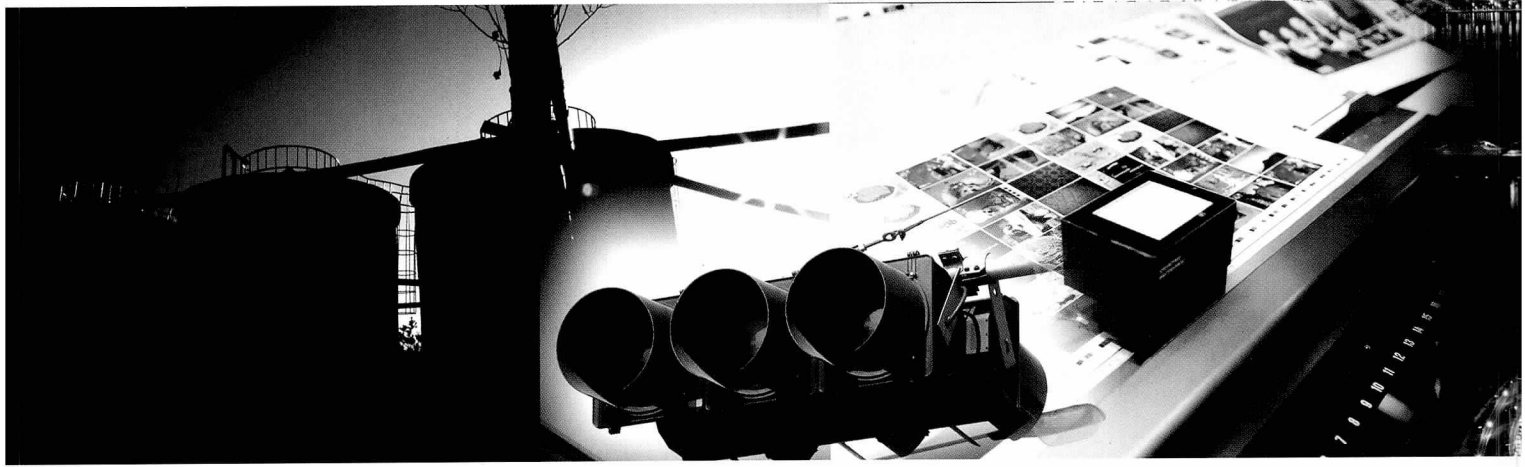
업 전체의 재해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요율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보험급여 지급액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9.5%로 증가했고 보험요율은 20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보험급여 및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급여 지급액이 200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게 됐다.

## 보험료 지출 늘고 정부 지원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말 발표한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 재해자가 줄더라도 요양기간이 장기화되고 산재급여 등 보험료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재보험료 전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상 정부는 공단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전무한데다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사업 지출 예산 총액의 3% 이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규정도 유명무실화해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단 인건비, 운영비에 전용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충당되는 순보험요율(85%)과 보험사업, 산재예방에 소요되는 부가보험요율(15%)로 구성돼 있어 올해 산재보험료 가운데 부가보험요율(15%)은 381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867억원, 산업안전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653억원, 공단 직원 용자 21억원 등이 부가보험료에서 충당돼 부가보험료 실제 지출은 5770억원이나 됐다.

부가보험료 집행이 실제 한도를 넘어 서면서 그만큼 순보험료 부문은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부가보험요율 15%에 대한 산정 근거도 충분치 못한 것이다.

〈인쇄 및 관련 산업 2003년/2004년 산업재해 현황 및 2004년/2005년 산재보상보험요율〉

구분	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보험요율
펄프, 지류제조, 제본, 인쇄물가공	43,049/46,278	583/514	9/16	1.35/1.11	2.09/3.46	20/23
신문 및 화폐발행, 출판, 경인쇄	83,491/82,426	184/150	8/9	0.22/0.18	0.96/1.09	5/6
인쇄업	38,666/40,216	362/308	3/4	0.94/0.77	0.78/0.99	15/18

※산업재해 통계는 9월말 기준

## 올해 바뀐 고용 및 산재보험 징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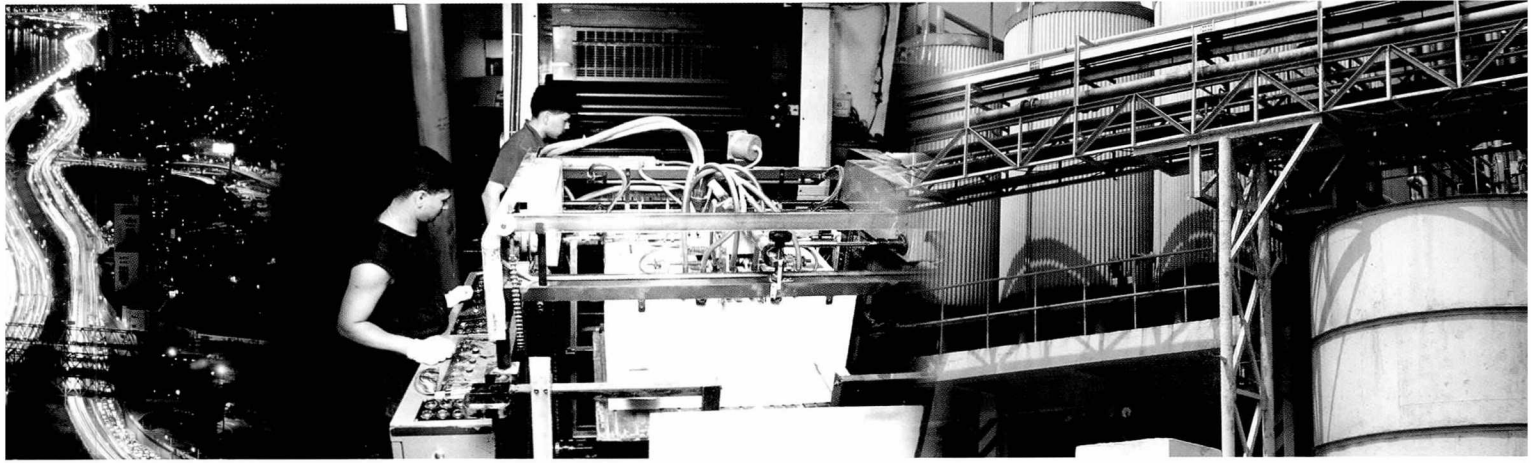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12월31일에 제정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4년 10월1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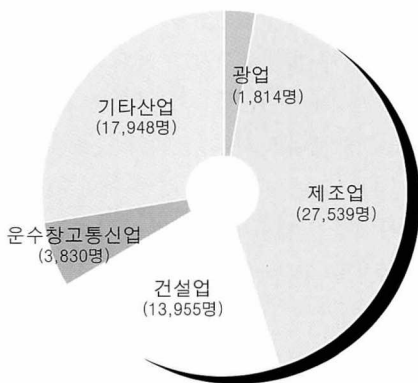
보험료 신고·납부시기가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3월 10일 또는 11일)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요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사업종류별로 결정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와 재해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기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부과방법이 매분기 3.6%에서 매월 1.2%로 변경됐고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고용·산재보험 모두 300인미만(현재 고용 100인, 산재 300인미만)으로 통일됐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개인용달운송업자 등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업종별 재해자 분포도〉



〈연도별 보험급여 및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추정)
보험급여	12,742	14,563	17,446	20,203	24,818	29,283
(증감율)	(-)	(14.3)	(19.8)	(15.8)	(22.8)	(18.0)
재정 수입	15,970	19,555	23,645	27,156	27,112	32,308
수지						
지출	14,992	16,847	19,998	24,352	29,607	34,688
수지차	978	2,708	3,647	2,804	-2,495	-2,380
평균보험요율	16.5	17.6	16.7	14.9	13.6	14.8
(증감율)	(-)	(6.7)	(-5.1)	(-10.8)	(-8.7)	(8.8)

### 기업부담 덜고 정부 지원 폭 넓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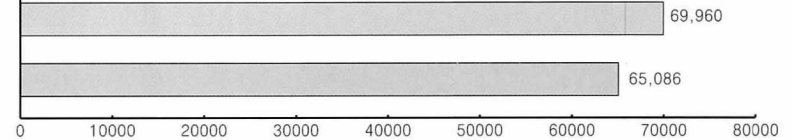
올해 책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산업재해율을 줄여가고 있으면서도 산재보험료는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인쇄업체를 비롯한 각 기업들의 불만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재정악화를 전적으로 기업들이 떠맡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산재보험법상 지원하도록 돼 있는 공단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사업 지출 예산 총액에 대한 3% 이내 지원 규정의 취지를 살려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가 공단 인건비, 운영비에 전용되는 일을 막고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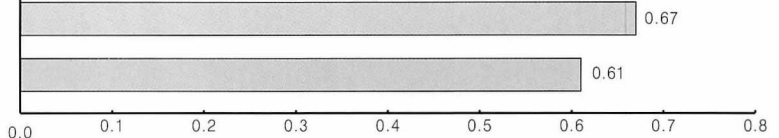
〈조갑준 차장〉

2003년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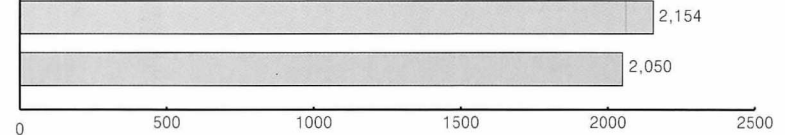
〈재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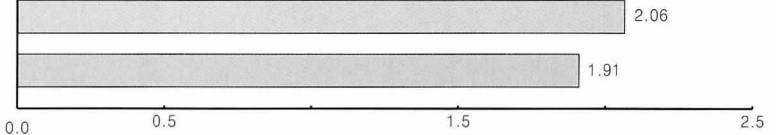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

